

지방자치·종합

“거수기 의회 운영으로 물갈이 자초”

■ 제5대 광주시의회 평가

15일 폐회식과 함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한 제5대 광주시의회는 조례발의 등 나름대로 충실했던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전문성이 크게 부족해 집행부에 대한 거수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소속 정당의 이익 행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과오=5대 광주시의회의 가장 큰 오점은 의원 6명이 선거법 위반과 금품수수, 공문서변조 등 각종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됐거나 중도에 두는 오명을 안았다. 또한, 의원들 모두가 민주당 일색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5대 의회 개원과 함께 벌어진 전·후반기 입장선거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편 나누기

전문성 부족…집행부 비판·견제 기능 못해

담합·폭력·편가르기 등 파…6명 사법처리도

등을 통한 담합과 폭력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의원 자질론도 대두했다. 전반기 의장 선거의 경우 비주류 층이 ‘의장단 직무정지’ 가져분신 청’ ‘당선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해 원구성이 2개 월 지체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하반기 의장선거부터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제’로 바뀌게 됐다. 하지만, 하반기 선거도 압합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의장 선임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5대 시의회는 의장·부의장단, 상임위원회의 책임분과 함께 ‘거수기 의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민주노동당과 특별 5대 의회 개원과 함께 벌어진 전·후반기 입장선거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편 나누기

13%, 상임위 출석률은 92.54%로 전국 16개 시·도중 2위를 차지하는 등 정책의회로서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받았고, 2008년엔 장애인정책 최우수의회로 선정되는 등 외부 기관 평가도 날마다 있다.

첨단산업육성과 문화수도조성을 위해 광주시와 협력을 강화했고, 5·12 관악경제권, 세종시 문제 등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여론을 충실히 대변해 국가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문화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구지역 구도심 활성화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건설에 주력한 결과, 지난 1년여 갈등을 유발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와 보존문제와 관련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논란을 종식하는 데 기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북, 안보리서 ‘천안함’ 공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대로 남북간 ‘천안함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유엔본부 회의실에서 우리측 민·군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천안함 조사결과와 브리핑을 받은데 이어 주 유엔 북한대표부로부터 우리측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북한측은 ‘비공식 상호대화(Informal Interactive Dialogue)’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적극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클로드 헬러 안보리 의장의 개회 발언으로 시작된 브리핑에서 박인국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소개발언에 이어 사건개요와 어뢰추진체 인양 당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상영하고 이번 사건이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1시간20분간에 걸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기술적 부분을 중심으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시의원 당선자들이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 중단 촉구와 사업저지’를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대안 모색하라”

광주시의원 당선자 26명 이명박 정부에 촉구

광주시의회 의원 당선자 26명은 15일 “이명박 정부는 영산강을 포함한 4대 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당선자는 이날 광주YMCA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 강 사업의 중단을 선택했고, 당선자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망국적인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중단’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헤아려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의 4대 강 사업 반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6대 광주시의회가 개원하면 강 당선자와 함께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강행

되고 있는 영산강 사업의 중단과 대안

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전남도 의회 등 각급 의회, 의원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다음달 1일 새롭게 취임하는 시장과 시의회 당선자 대부분이 4대강 공사의 중단을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이들이 취임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4대 강 사업의 하나로 광주

시가 직접 시행하는 ‘영산강 7공구 공사’ 및 준설토의 적지장 운영 등의 사업을 일시 중단할 것을 현 박광래 광주시 장과 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靑 “지자체 반대 땐 4대강 구간별 재검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5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해당 기초 단체 또는 광역단체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끝까지 반대한다면 구간별로 사업 재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이 시작될 때 지방자치단체

의 건의를 받아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포함한 것인 만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이 정발로 반대할 경우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 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경남, 충남, 충북, 강원도 등에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자치 브리핑

F1대회 의료시스템 구축 완료

F1대회 조직위원회가 전남대병원 등 5개소를 응급환자 후송치료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F1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조직위는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목포한국병원·목포중앙병원 등 5곳을 응급환자 후송치료병원으로 지정하고 경주장내 응급수술을 위한 메디컬센터 설치와 이곳에 근무할 의료진 20명도 대학병원의 협조를 받기로 한 것을 글자로 한 F1대회 의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회 의료분야를 총괄하는 ‘CMO’(Chief Medical Officer)에는 범희승 전 화순전남대병원장을 임명했다. 또 서식에 근무하는 의료진 중 구조구급 등 전문인력은 모두 병원근무 의료진에서 뽑기로 했으며 응급환자 후송을 담당할 의료진 78명은 공공보건기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밖에 헬기 2대와 구급차 9대 등도 배치할 계획이며 일반 관람객의 응급진료를 위해 응급의료 팀역센터를 설치하고 일반진료소 10곳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8일까지 도시디자인 탐사단 모집

광주시가 오는 28일까지 도시디자인 탐사단을 모집한다. 탐사단은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동안 광주지역 경관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불편하거나 잘못된 디자인을 찾아 제보·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 65세 이하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광주시 홈페이지(www.kwangju.go.kr)와 이메일(cho1546@korea.kr), 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탐사단원에게는 증명서와 응품(모자 등), 수첩 및 탐사에 필요한 비용 등이 제공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디자인의 틀을 고민하게 위해 탐사단을 모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U대회 영어스쿨 2기 수강생 모집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오는 21일까지 영어스쿨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조직위는 면접을 통해 1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수강생들은 7~8월 두 달간 조선대·광주대·호남대 등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부터 총 40시간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조직위원회(616-3230)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일단 유보”

전남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일숙 전남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전교조 교원 징계 절차에 대해 장마체 교육감 당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 위해 일단 유보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선 시도 교육청에 지난 13일까지 이를 교사를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했으며, 전남도 교육청의 해당 교사는 초등 1명과 중등 2명 등 3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무원

2010년 전남 도록행복 창조연 모집에
본 학원 출신 88명 합격 (합격률 67%)
10년 만에 광주·전남 출신 학생 100%
광주·전남 출신 학생 100% 합격률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한국

한국